

### ‘동구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3차례 주민간담회 해 놓고 돌연 없던 일?

# 광주시 오락가락 행정... 커지는 시민 불신

태양광 시설 뜯고 공원 조성  
상수도본부 간부 “사업 추진”  
담당직원은 “검토한 적 없다”  
봉선동 배수지 조성 논란 속  
또 불협화음에 신뢰 잃어가



광주시 동구 소태동 지원배수지에 조성된 태양광발전 시설. 시설면적 1609㎡에 달하는 이 공간에서는 265kW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최대 150억원 규모의 ‘동구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을 놓고 시청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는 주민과 시민회, 동구청 등을 상대로 사업추진을 약속한 반면 담당 직원은 ‘검토나 계획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해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불만을 초래한 ‘봉선동 배수지 조성’ 사업에서도 사업의 적절성·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부 이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한 바 있다.

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동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455억3900만원을 들여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봉선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 지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끌어온 수돗물을 모아두는 소규모 저장시설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최근 “광주시가 지원배수지와 봉선배수지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021년까지 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사업추진을 가정시화했다.

박 의원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 배수지에 설치돼 2024년까지 계약된 태양광(시설면적 1609㎡·발전용량 265kW) 임대 문제를 포함해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 150억원을 투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착공해 2년안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동구청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455억3900만원을 들여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 ‘봉선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 지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끌어온 수돗물을 모아두는 소규모 저장시설이다.

박 의원은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 배수지에 설치돼 2024년까지 계약된 태양광(시설면적 1609㎡·발전용량 265kW) 임대 문제를 포함해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 150억원을 투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착공해 2년안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 지난 9월 4일과 11일, 지난달 11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광주시 동구 지원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1일 주민간담회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박미정 시의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지원동 주민 등이 참석했다.

박 시의원과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가 ‘총 3단계에 걸쳐 태양광 시설을 해체하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선거 이전인 5월중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이용섭 시장과 임택 구청장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면서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등

의 소지가 있어 가지 않았다. 이후 변호사 3명에게 해당 시설 내 태양광 발전 시설 해체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은 “지원배수지 주변은 정비하고 있지만 태양광 시설 해체와 공원조성 계획은 전혀 없다. 태양광 시설 해체 계획도 없기 때문에 해체에 따른 위약금 등도 산정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는 시청 자체 언론 취재 관련 내부 보고 문서에서도 ‘태양광 시설 해체 사업과 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측의 이런 엇갈린 행보는 각종 설을 낳고 있다. 동구 지원배수지가 공원화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배수지 바로 앞 아파트에 광주시청 건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 요직 독식 ‘귀족검사’ 사라진다

특수·공안만 해선 승진 못해  
법무부 ‘검사 인사규정’ 마련

법무부·대검찰청·수도권 검찰청 등이 이른바 ‘노론자위’ 입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다수가 선호하는 보임지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다른 지방청에서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지원배수지 등 광주시 상수도 햇빛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 에스이에스(주)와 광주시 상수도 햇빛발전소 건설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부터 2015년 2월 까지 태양광 시설 공사를 시행했고 같은해 3월 6일부터 발전을 개시했다. 임대료와 1억4200만원 수준의 발전수익배당금을 받는 등 연간 1억50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새 규정은 법무부·대검을 거친 평검사들이 수도권에서 3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예컨대 수도권 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했다면 그다음 임지는 반드시 수도권 밖 지방으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옮겨 다니며 서울권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이 대열에 끼지 못한 다수의 형사부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 문제가 돼 왔다.

법무부는 또한 검사 업무의 기본이 되는 형사·공판·조사부 보직을 재직 기간의 40% 이상 수행해야만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기획·특수·공안 등 특정 분야 업무만 내내 맡아서는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대다수가 선호하는 보임지는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되 근무 기회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제도를 법령화한다는 데 이번 개선안의 의미가 있다”며 “검사 인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는 대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량권은 축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새 인사제도를 법령 제·개정용 거친 뒤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새 인사제도를 법령 제·개정용 거친 뒤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윤필용 사건’ 연루 강제전역... 법원 “전역 무효”

박정기 전 한전 사장 명예회복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박정기(83)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보안사 소속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으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분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 전 사장은 1958년 소위로 입관, 이후 중령으로 진급해 제722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1973년 강제 전역당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기의 대동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변질된 일이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보안사 서빙고분실

로 압송돼 조사관들로부터 윤 전 소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받고, 구타와 협박 끝에 강제로 전역 지원서에 서명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하다

20대, 고교생들과 주먹질

광주서부경찰은 5일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훈계하다 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백모(26)씨 등 2명과 문모(18)군 등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4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성촌동 한 어린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문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군은 이에 대해 항해 백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 일행은 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공원에서 흡연하는 문군을 보고 “학생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며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보안사 서빙고분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정식 가동 앞둔 울돌목 조류발전소 파손

예인선이 들이받아 전력공급 계획 차질

내년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는 국내 첫 조류(潮流) 발전시설인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소를 선박이 들이받아 전력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진도군 울돌목 해상에서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소(150kW급)의 외부 구조물과 예인선(164t)이 충돌했다. 사고 선박은 300여 년의 부선 2척을 연결해 인천으로 출발하던 중 부선이 조류에 밀려 발전소와 육지를 이어 주는 보행자 통로(길이 150m·너비 1.2m)

)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행자 통로와 전력·통신 선이 끊어지며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울돌목 조류 발전소는 올해 시험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일반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측은 사고 복구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 발전소 당직자 등을 상대로 선박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술 마시고 전차 운영 식당 차 몰고 돌진

광산경찰, 50대 붙잡아 조사

광주광산경찰은 5일 술을 마시고 전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께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5% 상태로 차를 몰아 광주시 광산구에서 전차 B(56)씨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전날 전차와 다툰 A씨는

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양심을 품고 식당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으려다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차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차를 몰고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66주년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2018타경 9744, 2018타경 10959, etc.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properties like 2018타경 3050, 2018타경 13019, etc.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하는 최고가매수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② 매각대금의 내역은 매각결정일 전일까지...  
③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④ 특별매각조건은 내역은 매각결정일 전일까지...  
⑤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⑥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⑦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⑧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⑨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⑩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⑪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⑫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⑬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⑭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⑮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⑯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⑰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⑱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⑲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⑳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㉑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㉒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㉓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㉔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㉕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㉖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㉗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㉘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㉙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㉚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㉛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㉜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㉝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㉞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㉟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㊱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㊲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㊳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㊴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㊵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㊶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㊷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㊸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㊹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㊺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㊻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㊼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㊽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㊾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㊿ 매각대금 납부후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  
2018. 11. 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